

## 인공지능(AI)의 군사적 이용 문제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

아산정책연구원  
심상민 연구위원  
2023.02.17.

미국의 스타트업인 오픈 AI 가 내놓은 챗 GPT, 즉 대화형 인공지능(AI) 서비스의 놀라운 성능이 연일 화제이다.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챗 GPT 가 AI 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직접 검색하고 그 결과를 단문의 형식으로 보여주는데, 그 정확도와 응용력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. AI 가 가진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AI 에 의해 대체되고 사회적, 경제적으로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.

이러한 AI 가 군사적 용도로 이용된다면 어떨까. 살상력을 가진 무기에 AI 의 분석과 판단이 결합될 경우 신속하게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, 전력 열세를 단숨에 만회하여 확실한 승기를 잡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자동화된 AI 의 판단으로 공격이 개시되었는데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알고리즘의 결함으로 잘못된 결과, 예를 들어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오인하고 사격하는 결과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.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통제가 어느 단계부터 필요할까.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의 독자 행동,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의 AI 시스템인 '스카이넷'의 반란과 같은 파멸적 결과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할까.

AI 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법적, 윤리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시작이 늦은 감이 있다. 국제연합(UN) 차원에서는 2014 년부터 자율살상무기체계(LAWS)에 관한 정부전문가그룹(GGE)을 결성하여 2019 년 국제인도법의 적용, 무기체계 사용결정에 대한 인간의 책임 등 11 개 지도원칙을 발표하였다.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였는데, 그 바탕에는 AI 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규제를 지지하는

국가군과 지나친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에 대한 제약을 우려하는 미국, 영국 등 일부 선진국 간 의견 대립이 있다. 이러한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공통 관심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규범 체계의 창설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견국가들의 선도적 기여가 필요하다.

이와 관련하여 '군사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 에 관한 장관급 회의(REAIM)'가 2 월 15 일부터 16 일(현지시간)까지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다. 이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내포된 특징과 위험을 비롯해 윤리 문제, 책임 있는 AI 의 군사적 응용을 위한 규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세션이 마련되어 있는데, 특기할 만한 것은 네덜란드와 우리나라가 공동주최국이라는 사실이다. 두 나라 모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며,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객관적 논의를 통해 AI 의 군사적 이용이라는 국제정치적으로 첨예한 주제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넓힐 역량을 갖추고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 AI 를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기반이 탄탄하고 현안의 이해도도 높아, 이 주제의 논의를 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.

2018 년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은 국방 관련 AI 연구로 무차별 살상무기인 킬러로봇을 개발한다는 오해를 받아 국제석학들과의 공동연구 보이콧에 휘말리는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. AI 기술개발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, 우리나라가 AI 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확립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. 국익에 주의를 기울이며 국제사회에도 공헌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AI 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외교적 논의의 선도를 통해서도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.

\* 본 글은 2 월 17 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이며,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.